

# 냉전 이후 일북 관계의 시대별 주요 특징: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세력

신정화 \_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시대별 주요 현안과 특징
  - 1. 1990년대: 과거사 청산과 국교정상화협상
  - 2. 2000년대: 안전보장 확보와 북일정상회담
  - 3. 2010년대: 납치문제 해결과 「5·28 스톡홀름 합의」
- III. 마무리 글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본과 북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동북아 정세, 일본과 북한의 국가목표 그리고 일본의 국내정치세력의 변화를 배경으로 시대별로 분석한 것이다.

1990년대, 한중국교정상화가 상징하는 동북아의 냉전 균열을 배경으로 일본과 북한은 국교 정상화를 시도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북한은 한국과의 비대칭성에 대항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외부자금을 확보하고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는 일본이 북핵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실패했다.

2000년대, 9·11테러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북한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조속한 국교정상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북일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의 이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저

지라는 점에서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상화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의해 실패했다.

2010년대, 동북아에서는 신냉전이 형성되어 왔다. 일본과 북한은 납치문제의 해결과 국교정상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5·28 스톡홀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북한은 일본의 자금 지원을 중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4차 핵 실험을 계기로 일본이 대북제재를 재개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는 재차 악화되어 버렸다.

### 주제어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세력, 국교정상화, 북일평양선언,  
5·28 스톡홀름합의, 북한핵문제, 납치문제

.....

## I . 들어가는 글

일본과 북한은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국가 목표는 물론 양국 관계는 동북아 지역 질서에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어 왔다. 냉전 붕괴 이래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온 동북아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힘의 균형체제는 일본과 북한에게 새로운 국가 목표와 그의 달성을 위한 정책을 요구해 왔다. 일본은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경제대국에서 경제대국에 부합하는 정치군사대국으로,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에서 체제유지로 국가목표를 각기 변경했다. 그리고 양국은 새로운 국가목표 하에서 상대국에 대한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이처럼 동북아의 지역 질서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국가목표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북일 관계는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본 논문은 냉전 붕괴 이후인 1990년부터 현재의 2016년까지 약 사반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일본과 북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동북아 정세, 그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온 일본과 북한의 국가목표 그리고 국내정치세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시기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해 각 시기별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일본과 북한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한다.

## II . 시대별 주요 현안과 특징

### 1. 1990년대: 과거사 청산과 국교정상화협상

80년대 말의 국제적 차원의 냉전 해체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에게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1988년 7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7·7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7·7 특별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일, 중·소 등 동북아 4강과 남북한이 상호 교차수교 및 승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그 근거에는 한국이 북한의 우방인 소련·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를 통해 북한을 한국과의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낸다는 '우회'적 북한 흡수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1992년 동북아 냉전구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대륙진영의 핵심국인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에 성공했다.

한편, 한중국교정상화는 일본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는 냉전기 북일 관계 개선을 저지해 온 한국의 반대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했으며, 북한에게는 한국에게 기을

어진 힘의 불균형을 재조정할 긴급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1990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의 자민·사회당 대표단과 북한 조선로동당이 발표한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자민·사회당 대표단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주장한 배경에는 사회당이 70년대 이래 북한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해 온 친북성향의 정당이었으며, 또 방북단의 공동대표였던 자민당 부총리 가네마루 신(金丸信)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고 싶다는 정치가로서의 야망이 있었다. 이에 더해, 당시 걸프전쟁을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던 일본외교의 '소극성'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욕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sup>1)</sup> 간단히 말해, 동북아 지역의 냉전 구조가 한국 주도로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자민당과 사회당의 관계이다. 55년 체제하에서 보수정치세력인 여당 자민당과 진보정치세력인 야당 사회당은 미일안보조약과 평화헌법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대북 창구를 가질 수 없는 정부·자민당의 한계를 친북성향의 정당인 사회당이 보완해 왔다.<sup>2)</sup>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기에 자민·사회당 방북단이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3당 공동선언' 이후 진행되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정치세력은 물론 사회당이었다. 그리고 이에 힘을 실

---

1) 일본은 냉전 종료 직후인 1991년 1월에 발발한 걸프전쟁에의 경제적 지원이 국제사회로부터 '수표외교'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를 계기로 말과 돈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달성예의 기여하는 방침을 모색해 자위대의 PKO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평화협력법안을 성립시켰다. 냉전 붕괴 이후 일본 국내에서 전개된 외교 및 안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은 이면 우,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 한울 아카데미, 2011년, 156~158쪽을 참조할 것.

2)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도서출판 오름, 2003년, 15~17쪽.

어준 것이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를 비롯한 가네마루,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가토 고이치(加藤宏一) 등 80~90년대 자민당 최대파벌 보수 본류 누카가(額賀)파와 기시다(岸田)파에 속하는 정치가들이었다.<sup>3)</sup> 평화국가 일본, 경제대국 일본을 지향해 온 이들 정치세력들은 과거사 청산과 전후 처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안전보장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은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함으로써 초래된 한국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국교가 정상화된다면 80년대 이래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외부자금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냉전기에도 북한은 일본에 대해 국교정상화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한반도 교차승인으로 이어져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을 경계해, 국교정상화를 더 이상 제안하지 않아 왔다.<sup>4)</sup> 따라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분단의 고착화보다 한국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는 것을 더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북한은 냉전의 붕괴로 불리해진 한국과의 대립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체제 유지를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택한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1991년 1월부터 다음 해인 1992년 11월에 걸쳐 전후

3) 누카가파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계보를 따랐던 사토(佐藤)파에서 출발해 다나카(田中)파와 다케시다(竹下)파, 오부치(小淵)파, 하시모토(橋本)파로 이어진다. 이케다(池田)파인 고치카이(宏池会)와 함께 자민당 내 보수 본류 그룹으로, 80~90년대 자민당 내 최대 파벌로 이권정치를 주도하고 인사와 자금면에서 자민당을 이끌었다. 또 기시다(岸田)파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온건 비둘기파로 요시다의 계보를 계승했으나, 이케다 총리에 의해 시작되었다. 오히라(大平), 스즈키(鈴木), 미야자와(宮澤), 가토(加藤)를 거치면서 자민당의 보수 본류를 구성했다.

4) 그 대표적 예가 1955년 남일 외상의 제안, 1972년 박성철 부수상의 제안이다.

최초로 국교정상화 협상(총 8회)을 가졌다. 협상은 기본문제, 경제문제, 국제문제,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 등 4개의 쟁점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양국은 전 분야에 걸쳐 대립하였다. 북한은 국교정상화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제 문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해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기본문제와 경제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과 보상은 할 수 없으며, 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교정상화 협상은 결렬되었다. 일본 측이 '3당 공동선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협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외무성 관료들이 과거사 청산을 중시하는 누카가(額賀)파와 기시다(岸田)파 정치가들과는 달리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민감한 미국의 의향을 우선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이 실패로 끝난 후, 북한은 1993년 3월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을 수단으로 미국에 협상을 요구한다.<sup>5)</sup>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벼랑끝 외교에 나선 것이다.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져,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자 일본의 정치세력들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3월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던 자민당, 사회당, 그리고 신당 사키가케(さきがけ)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동 연립내각은 1993년 55년 체제의 붕괴이후 성립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에서 야당으로 전락

5) 防衛省・自衛隊,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 <http://www.mod.go.jp>(검색일: 2016년 4월 17일).

한 자민당이 여당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회당의 당수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를 내각수반으로 내세운 정권이였다. 여하튼 이들 방북단은 조선로동당과 '4당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조속한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방북단을 배후에서 지원한 정치세력은 연립정권의 총리이며 사회당 당수인 무라야마와 사회당과의 연립정권을 주도한 자민당의 가토, 그리고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등이었다. 이들 정치세력은 북일국교정상화를 방해해 왔던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단락되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다시 시도한 것이다.

무라야마내각은 국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식량지원에 응하는 등 북한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협상은 쉽게 진척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한의 관심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북한 측 요인에 더하여, 협상을 담당할 외무성이 북한 붕괴시나리오에 입각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협상은 다음 해인 1996년 1월 총리가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에서 자민당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로 교체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6년 1월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에 복귀한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리가 힘을 기울인 것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보다 변화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부합하도록 미일동맹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시모토 내각은 같은 해 4월 「미일안전보장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동맹-」을, 다음해인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sup>6)</sup> 그리고 다음해인 1997년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로 상징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부상하자, 북한에 대해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납치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또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한 사태'로

6) 防衛省・自衛隊,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ての同盟-」,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http://www.mod.go.jp> (검색일: 2016년 3월 30일).

규정하고 한국과 미국에 미사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각료급협의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고 있던 TMD(전역미사일방어) 체제의 구축 및 정찰위성의 도입을 신속히 결정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을 가결시켰다.<sup>7)</sup> 일본이 대북정책의 중심을 과거사 청산을 중시하는 관계 개선에서 안전보장 관점에 입각한 군사적 대응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 2. 2000년대: 안전보장 확보와 북일정상회담

2001년 발생한 9·11테러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국제정세를 바꾸어 놓았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반테러 국제연대를 강조했다.<sup>8)</sup>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21세기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요체로 일본을 설정했다.<sup>9)</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정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7) 하시모토내각이 추진한 「미일신안보선언」,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등은 대북견제뿐만 아니라, 대중견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과 2·13합의」,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 자료 41, 2007, 74~76쪽.

8) 김종완, 「미국의 반테러전쟁: 911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2002-4(통권 69호), 7-9쪽. 부시 행정부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억제와 봉쇄 위주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선제공격, 예방적 개입, 핵무기 사용 불사, 그리고 불량국가들의 정권 교체까지 도모하는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세계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 미국이 규정한 선과 악이라는 구도 하에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돕는 국가들은 친구이며, 이를 방해하거나 돕지 않는 국가는 적 혹은 비우호적인 국가임을 분명히 했다.

9) Richard L. Armitage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11, 2000.

한편, 90년대의 온건파 고치가이(宏池会)의 몰락을 배경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강경파 세와카이(清和会) 소속의 정치가들은 일본의 외교·군사적 지평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세와카이의 호소다(細田)파에 속하는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11월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적극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성립시켜 자위대의 아프카니스탄 전쟁 지역에서의 파견을 합법화했다.<sup>10)</sup> 그러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사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한 90년대의 고치가이 소속의 총리들과는 물론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중시하는 세와카이 소속의 후임 총리들과도 일정부분 차이를 보였다.

북일 관계 개선을 먼저 모색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으로 대변되는 강경자세에 군사적 위협을 느낀 북한이었다.<sup>11)</sup> 북한은 북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약 1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협상에서 일본에 대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완화시키는 중간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sup>12)</sup> 한편, 일본도 북한과 미국의 중개역할을 수행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왜냐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약 200~300발의 이동식 노동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북한을 공격한다면,

10) 호소다파는 기시 노부스케, 하토야마 이치로의 영향을 받았으며 1979년 후쿠다 총리 퇴진 후 결성된 세와카이에서 이어진 자민당 내 강경파 파벌이다. 2005년 9월 총선에서 하시모토파를 누르고 제1파벌로 등장했으며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총리를 배출했다. 친미외교, 헌법개정, 군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과거사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을 거부한다.

11) 북한은 2월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가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망발한 것은 그 어떤 무기 문제나 테러와의 연관성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 우리 최고수뇌부와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서 나온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힘으로 변경시켜 보려는 부시 패거리와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12) 杉田米行 編, 『どうする 日朝關係一環太平洋視点から』, リベルタ出版, 2004, 21쪽.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sup>13)</sup> 한마디로 말해,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입장이었다.

이에 더해 만약 북일 관계가 개선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같은 해 7월에 선포한 '7·1 경제관리조치'의 성공을 위해 절실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의 명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동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었다.<sup>14)</sup>

전후 처음으로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양 정상은 「북일 평양선언」에서 “조·일 사이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인 했다.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상호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 따라 지역의 신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sup>15)</sup>

13) 小此木政夫 外, 「北朝鮮核問題の解決のための政策提言レポート」(2003年 7月),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4) 길병욱·김학성, 「동북아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방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3호, 2004, 14쪽.

15) 제1항은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제2항은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사죄의 뜻을 표명하며, 국교 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경제협력을 실시한다. 제3항은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제4항은 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납치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일본과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이 90년대 이후 해명을 요구해 왔던 일본인 납치의혹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북한이 납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납치의혹이 납치사실로 격상한 것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실에 일본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납치피해자 가족이 조직한 ‘가족회’를 선두로 한 보수세력들이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묵인하고 있었던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을 사용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 북일 관계 진전에 부정적 태도를 표명했다.

돌이켜 보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인이 전후 처음으로 경험한 타국에 의한 ‘피해자’의 경험이었다. 납치문제는 보수화가 진행되던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많은 일본인의 의식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시켰다.<sup>16)</sup> 이 시기부터 많은 일본인들은 납치문제를 북일 간의 최대 현안으로,<sup>17)</sup> 또 북한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라” 또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압력을 우선시하는 강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sup>18)</sup>

결국,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시도는 실패했으며, 또 양국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이에 힘입은 2004년 참의원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승리는 세와카이의 세력 확대에 기여했다.

한편, 강성대국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던 북한은 북일국교정상

---

로 납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일평양선언』(2002.9.18).

16) 히라이 히사시,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 기회와 정체—시련에 직면한 ‘스톡홀름 합의」, 『한반도포커스』 제31호, 2015, 17쪽.

17)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01年~2014年), <http://www.cao.go.jp>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18) 「北朝鮮から攻撃されると思いますか」, 『AERA』(2003.4.21).

화가 결렬된 다음 달인 10월 미국이 추구하고 있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사용한 핵개발을 인정했다.<sup>19)</sup> 그리고 2개월 후인 12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을 추방하고, 다음해 인 2003년 1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미국에 대해 불가침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에 의해 북핵문제가 해결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이 북핵문제가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세계와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동북아 국가 간의 다자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2003년 8월 북경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6개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치되었으나, 그 이외의 현안인 미사일, 납치문제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핵문제와 동일한 의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함께 미사일 개발문제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치문제가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였던 것에 더해,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발사실험을 행하고 있는 북한이 핵의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일본이 직접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최초,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6자 회담에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가 북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

19)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 발전 목표로 제시했다. ‘강성대국 건설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치사상강국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나라”로서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이다. 다음으로 군사강국은 국력의 정수인 “군력을 핵으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력으로 강성대국의 지름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강국은 “강성대국의 물질적 토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2006, 327~328쪽.

이었다.<sup>20)</sup> 그러나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함에 따라 납치문제는 6자 회담의 공식 의제로는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북일 양자회담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모든 납치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일본으로의 귀국, 납치진상의 규명, 그리고 납치피해자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납치 시인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6자회담에서도 납치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2004년 발표된 『방위계획대강』은 이전(1976년, 1995년)과는 달리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도발활동이 일본을 포함한 지역의 안전보장에 긴급하고도 중대한 불안정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냉전시대 소련의 군사침략을 상징한 ‘기본적 방위력 구상’을 ‘동적 방위력’으로 변경한다고 선언했다.<sup>21)</sup>

2006년 9월 ‘아름다운 국가, 일본’을 내건 제1차 아베내각이 출범했다. 호소다파에 속하는 아베 총리는 1993년 중의원에 처음으로 당선한 이래 납치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관방부장관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동행한 아베는 납치문제가 부상하자 고이즈미 총리의 자세가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회담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아베는 납치문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의 주권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베를 북한에 의해 상처받은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정치가로서 받아들였다. 아베는 납치문제를 최대한으로 정치적으로 이

20) 藪中三十二, 『国家の運命』, 新潮新書, 2010, 139~141쪽.

21) 日本防衛省, 「平成17年度以降に関わる防衛計画の大綱」(2004.12), <http://www.mod.go.jp>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용해 보수정치의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4년 뒤인 2006년 9월 아베는 전후 최연소 총리이자, 전후 출생한 최초의 총리로 제 90대 총리에 취임했다.

총리 취임 후, 아베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내각 직속으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납치자 전원의 귀국과 책임자의 처벌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sup>22)</sup>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하자 아베내각은 “북한에 의한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며,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를 주도했다. 이에 더해 일본만의 단독 제재 조치도 실시했다.<sup>23)</sup> 일본의 단독 제재조치는 주로 조총련과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것으로 교통과 인적 교류의 차단 그리고 대북 무역 차단과 금융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는 물론 일본의 제재조치도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북한이 1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제1차

---

22) 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에 대해 납치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귀국시키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한다. 또 납치관련 진상규명과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계속해서 요구한다. 둘째, 차후 북한 측의 대응 등을 고려해, 한층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한다... 셋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일층 강화한다 등이었다. 拉致問題対策本部, 「拉致問題における今後の対応方針」(2006년10월16일), <http://www.kantei.go.jp> (검색일: 2016년 4월 30일).

23) 안보리는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서는 제1874호 결의안을,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은하3호) 발사에 대응하여서는 제2087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2013년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제2094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승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224, 2013, 4~14쪽을 참조할 것.

아베내각은 내각의 최주요 과제로 설정한 납치문제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007년 8월 붕괴되고 말았다.

### 3. 2010년대: 납치문제 해결과 「5·28 스톡홀름 합의」

천안함 폭침,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상징하듯이, 동북아의 2010년대는 군사적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더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있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다양한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및 군현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으며, 일본은 전후 금지되어 온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했다. 동북아에서는 신냉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2012년 12월, 리버럴 국제주의노선을 내건 민주당 정권의 붕괴 후, 5년 만에 재등장한 제2차 아베내각은 ‘평화창조국가 일본’을 내걸었다. 즉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평화국가’의 전통을 지켜 온 일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실현을 위한 외교정책으로는 미일동맹의 강화, 중국 견제, 강경한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간단히 말해, 제1차 아베내각(2006년 9월~2007년 8월)은 ‘아름다운 국가, 일본’을 내걸고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의 부흥과 역사 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적 우파’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리고 제2차 내각은 제1차 내각의 성격을 계승하면서, 군사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군사적 우파’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sup>25)</sup>

24) 홍현의, 「동북아 신냉전 질서 형성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정세와 정책』 2012년 7월호, 16-17쪽.

25) 이종원은 일본의 우파를 다음의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우파’로 재계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해 신자유주의적 개혁, 즉 시장원

제2차 아베내각은 제1차 내각과 동일하게 납치문제의 해결을 내각의 주요과제로 설정했다. 아베총리는 납치문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는 미증유의 국가적 범죄행위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말끔히 해결할 결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sup>26)</sup>

2014년 5월 28일, 일본과 북한은 「5·28 스톡홀름 합의」를 발표했다. 2006년의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단절되어 온 북일 관계가 8년 만에 개선의 조짐을 보인 것이다. 「5·28 스톡홀름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일본은 첫째, 「북일평양선언」에 기반해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표명하고, 둘째,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치자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인적 왕래 등의 규제조치 및 인도적 목적의 북조선 선박의 일본에의 입항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셋째, 인도적 견지에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의 실시를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첫째, 잔류 일본인과 납치피해자 등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둘째,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셋째, 조사상황을 일본 측에 수시 통보하며, 일본인 유골과 생존자의 귀국을 포함한 거취 문제에 관해 일본 측과 협의하고, 넷째,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해 조사해 일본인 생존자가

---

리의 도입에 의한 구조개혁을 중시하며 추진한다. 두 번째는 ‘군사적 우파’로 안전보장을 중시해 군사력 및 군사태세의 정비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개정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사용 및 미일군사동맹 강화를 추구한다. 세 번째는 ‘이념적 우파’로 가족과 국가 등 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의 부흥, 역사수정주의 등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고이즈미는 첫 번째의 ‘경제적 우파’의 성격이 강하며, 아베는 두 번째 ‘군사적 우파’와 세 번째 ‘이념적 우파’를 겸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李鐘元, 「歴史過去の問題と東アジア外交」, 『韓日学術會議 安部政権と日韓關係』, 한국정치학회·현대일본학회·한일의원연맹공동 주최 학술대회 발표문(2006년 11월 7일).

26) 拉致問題対策本部(2013년1월25日), <http://www.kantei.go.jp> (검색일: 2016년 4월 30일).

발견되는 경우에 귀국시킨다는 것이었다.<sup>27)</sup>

한국과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연대가 중요한 가운데, 일본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면 한·미·일의 공조가 약화되고 김정은 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중국은 북일 관계의 개선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북한과 「5·28 스톡홀름 합의」를 도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아베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제1차 내각 당시 납치문제의 해결을 내각의 최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해결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따라서 아베가 국민들로부터 '실천하는 정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차 내각에서 실패한 납치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동해로의 해상 진출을 봉쇄하고, 중국의 북한 및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더해 종군위안부로 상징되는 과거사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한 대일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간단히 말해, 아베 총리는 국내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연대 견제 및 한일 간 외교 주도권 확립을 위해서 납치문제의 해결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경우, 첫째, 대북강경파인 아베가 국교정상화를 추진한다면 일본 내의 반대세력을 설득해 김정일의 유훈이기도 한 북일국교정상화를 쉽게 이루고, 경제강국 실현에 필요한 외부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201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경제는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벗어나고 있었다.<sup>28)</sup> 따라

27) 「日朝政府間協議(概要)」 <http://www.mofa.go.jp>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28) 한국은행,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15.7), <http://www.bok.or.kr>

서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확보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김정일 전(前)정권만큼은 절박하지 않았으나, 순조로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했다. 둘째, 납치문제와 관련해 강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조총련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셋째, 중국이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주도하는 대북압박정책에 동조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일본 카드를 통해 견제할 필요도 있었다.

「5·28 스톡홀름 합의」에 따른 첫 조치로 7월 1일 북한이 ‘납치피해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방법을 일본에 설명했다. 그러자 일본은 이를 뒤인 3일 대북 독자제재의 일부를 해제했다. 그 내용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후 조총련과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재 조치의 해제로, 첫째, 북한 당국자의 입국금지 등 인적 왕래 규제의 해제, 둘째, 10만 엔 이상 현금 반출 및 300만 엔 이상 송금 신고 의무의 해제, 셋째,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해제였다.<sup>29)</sup> 납치문제가 해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언론을 중심으로 국교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아베총리의 방북설이 흘러나왔다. 만약 「5·28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일 간 최대현안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어 북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갈등과 긴장이 확대되어 온 동북아 정세가 화해와 안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검색일: 2016년 4월 20일).

29) 북한이 구성한 ‘납치피해자 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안전담당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겸임하는 서대하였으며, 그 밑에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문제, 잔류 일본인 및 일본인 배우자를 각각 담당하는 4가지 분과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각 분과에는 북한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최고검찰소, 보건성, 조선적십자사 등 주요 국가기관의 요원 30여 명이 위원으로 소속되었다. 또 북한 최고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모든 북한 내 국가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가운데, 1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진행 상황은 수시로 일본에 보고하며, 조사의 투명성을 위해 일본 측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日朝政府間協議 特別調査委員会と日本の対北朝鮮被害の一部解除」(2015년 7월 4일), <http://www.mofa.go.jp>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9월 말 「5·28 스톡홀름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伊原)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송일천 북한 외무부 대사가 중국 심양에서 외교 당국 간 회합을 가졌다. 일본 측은 철저한 조사 및 결과의 조속한 통보를 북한에 요구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0월 말에는 이하라 등이 평양을 방문해 ‘납치피해자 특별조사위원회’와 협의를 가졌다. 북한 측은 과거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조속한 조사와 빠른 회답을 재삼 요구했다.<sup>30)</sup>

북한의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본은 12월 EU와 공동으로 「북한 인권상황 결의」를 유엔총회에 제출해 다음해인 2016년 3월 채택 시켰다. 또 조총련 의장 허남식의 자택을 송이버섯 부정수입 혐의로 수색하는 등 북한이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조총련에 대한 압박도 지속했다. 북한은 10월 일본에게 “우리는 스톡홀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 합의를 어겼다”, 따라서 “정부 간 대화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그러나 북한의 통지문에는 협의를 끝내겠다는 표현은 없었다. 북한은 일본과의 협의를 중단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2016년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행하고, “최초의 수폭실험이 성공리에 실시되었다”라는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즉각 아베내각은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결의를 표명한 안보리 제2094호에 따른 조치를 유엔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5·28 스톡홀름 합의」 후인 7월 3일에 해제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재실시했다.<sup>31)</sup> 결국 아베내각의 대북정책이 제재로 회귀함으로써

30) 「特別調査委員会との協議」, <http://www.mofa.go.jp> (검색일: 2016년 4월 20일).

31) 「我が国独自の対北朝鮮強硬措置について内閣総理大臣声明」 (2016년1월6일), <http://www.kantei.go.jp> (검색일: 2016년 4월 20일).

써, 북일관계는 「5·28 스톡홀름 합의」 이전의 상태로 복귀해 버렸다.

### Ⅲ. 마무리 글

일본에게 북한문제는 과거사 청산문제이자, 안보문제이다. 냉전 붕괴이후인 90년대 가이후, 미야자와, 무라야마총리로 이어지는 온건파(비둘기파) 내각들은 통상국가 일본을 지향했으며,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의 협조도 중시했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과 전후 처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 그리고 중국의 대국화가 진전되는 2000년대 고이즈미, 아베, 아소 타로(麻生太郎) 총리로 이어지는 강경파(매파) 세와카이 내각들은 경제대국에 부합하는 정치·군사대국 일본을 지향하면서, 과거사 청산보다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고이즈미내각이 전후 최초로 북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들 강경파 내각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으로 전제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대화보다는 제재를 우선시켰으며, 핵·미사일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강화로 대응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강경파 내각들은 정치·군사대국 일본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해 왔다. 또 2012년 재등장한 제2차 아베내각은 ‘평화창조국가, 일본’을 내걸고, 북한과의 관계를 납치문제와 군사문제로 집중시키면서, 중국과의 동북아 지역 패권 경쟁을 위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체제 유지라는 국가 목표

의 구현과 관련되어 있다. 냉전이 붕괴한 90년대 김일성 정권은 한중국교 정상화가 초래한 한반도 냉전체제의 비대칭성에 대항하고, 또 80년대 이후 악화되어 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91~92년 사이에 개최된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보다 미국과의 협상 수단인 핵개발을 우선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상정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2000년대 김정일 정권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즉, 군사강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제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 것이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2010년대 김정은 정권 역시 아직 달성되지 않은 경제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정권에게 있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과 북한의 동상이몽 가운데 90년대는 국교정상화협상이, 2000년대는 정상회담과 「북일평양선언」이 그리고 2010년대는 「5·28 스톡홀름 합의」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양국 관계 개선의 주도권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항시적으로 추구해 온 북한이 아니라, 납치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해 온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 **〔日本空圖〕**

논문 투고일 : 2016년 5월 19일

논문 심사일 : 2016년 5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16년 6월 7일

## 참고문헌

- 이면우,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 한울 아카데미, 2011.
-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도서출판 오름, 2003.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2006.
- 길병옥·김학성, 「동북아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방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20월 3호, 2004.
- 김종완, 「미국의 반테러전쟁: 911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2002-4(통권 69호).
-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과 2·13합의」,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41, 2007.
- 이승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224, 2013.
- 한국은행,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15.7).
- 홍현익, 「동북아 신냉전 질서 형성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정세와 정책』 2012년 7월호.
- 히라이 히사시,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 기회와 정체—시련에 직면한 ‘스톡홀름 합의’」, 『한반도포커스』 제31호(2015년 봄호).
- 藪中三十二, 『国家の運命』, 新潮新書, 2010.
- 大嶽秀夫, 『小泉純一郎ポピュリズムの研究』, 東洋經濟新報社, 2006.
- 杉田米行 編, 『どうする 日朝関係—環太平洋視点から』, リベルタ出版, 2004.
- 小此木政夫 外, 「北朝鮮核問題の解決のための政策提言レポート」(2003年 7月),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李鐘元, 「歴史過去の問題と東アジア外交」, 『韓日学術会議 安部政権と日韓関係』, 한국정치학회·현대일본학회·한일의원연맹공동 주최 학술대회 발표문 (2006년 11월 7일).
- 防衛省·自衛隊,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1998年6月2日),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ての同盟—」(1996年4月17日),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1997年9月23日), 「平成17年度以降に関する防衛計画の大綱」(2004年12月10日).
-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01年~2014年).
- 首相官邸, 「日朝政府間協議(概要)」(2014年5月30日), 「日朝政府間協議 特別調

査委員会と日本の対北朝鮮措置の一部解除」(2015年7月4日), 「特別調査委員会との協議」, 「我が国独自の対北朝鮮措置について内閣総理大臣声明」(2016年1月6日).

拉致問題対策本部, 「拉致問題における今後の対応方針」(2006年10月17日).

Richard L. Armitage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11, 2000.

「조일평양선언」(2002.9.18).

「北朝鮮から攻撃されると思いますか」, 『AERA』(2003.4.21).

<http://www.bok.or.kr>

<http://www.kantei.go.jp>

<http://www.cao.go.jp>

<http://www.mod.go.jp>

<http://www.mofa.go.jp>

Abstract

After the Cold War, Age-specific Features that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Northeast Asian Affairs, National Goal,  
Domestic Political Forces

Jung-Wha Shin

This paper analyzed the main featur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n the background of the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 situation, the national goal of Japan and North Korea and domestic political forces by age.

The 1990s, Japan and North Korea have tried to normalize relations in the background of the changes in Northeast Asia affairs that symboliz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Japan determined that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ould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Japan as well as expansion of influence in East Asia.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promote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Japan in order to overcome the asymmetry of South Korea and to gain the external funding need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ut, the two countries' attempt has been frustrated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2000s, in the background of strengthening of the US military threats against North Korea after 9/11, Japan and North Korea held the first summit and announced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confirming the need for a swift normalization of relations. Japan and North Korea shared the common opinion that U.S. should not take any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as a failure by the Japanese abduction issue.

The 2010s, the new Cold War in Northeast Asia has been formed. Japan and North Korea announced “5.28 Stockholm Agreement”. The main content of the agreement was to resolve the abduction issue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Japan has focused on the abduction issue while North Korea has focused on financial assistance from Japan. However the abduction issue has not been resolved and the conflict has been intensified by two countries.

#### Key words

Northeast Asia situation, National goal of Japan and North Korea, Domestic political forces,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issue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5.28 Stockholm Agreement, Abduction issue